광주, AI 중심도시 '속도'… 전남, 재생에너지 수도 '착착'

광주시

에너지·모빌리티 AX 본격 추진
AI예산 지역별 특화 전국 배분
중복 투자·인재 분산에 효과 의문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AI 2단계 사업인 'AX(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 확정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사업비가 대거 반영되면서 AI 생태계 기반 확충에 탄력이 붙었다.

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지역별 분산 배정에 방점이 찍혀 이미 AI 기반을 구축한 광주의 집적효과를 반감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X 실증밸리 본사업 가동=광주는 내년 정부 예산에서 AI 2단계 'AX실증밸리'가 본사업에 포함돼 2026년 '에너지·모빌리티 AX'를 본격 추진하게 됐다.

광주가 1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센터·주행시뮬레이터 등을 토대로 모빌리티·에너지 분야의 AI 전환 실증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된 것이다.

2단계 'AX 실증밸리' 사업은 미래차·에너지 등 전략산업의 AI 전환과 시민 체감형 도시·생활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총 6000억원 규모로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4300억원을 투입해 국가 AI데이터센터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 등 1단계 인프라 구축의 기반위에 진행되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AI 투자 확장도 광주에 우호적이다. 정부는 'AI 3강' 달성을 위해 내년 AI 분야 재정을 33조 3000억원에서 10조 1000억원으로 키우고,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AI를 신속 적용하는 'AX-Sprint 300'에 9000억원, 학습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성능 GPU 1.5만 장 추가 구매에 2조 1000억원을 배정했다.

전국적으로 연구개발(R&D) 총규모도 19.3% 늘어난 35.3조원으로 증액되며, 특히 'A(AI)' 축에서는 피지컬 AI 5대 선도사업과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등 핵심 과제가 1조 1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광주는 모빌리티·에너지 축에 특화된 실증 생태계를 이미 갖춰 이 예산 증가분을 연구개발과 실증, 상용화 단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기본구상 용역 10억원 등 도시·생활 분야의 AI 적용, 관련 연계 R&D 항목을 추가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차원의 AX 지역거점 240억원과 더불어 시가 확보한 개별 과제들이 결합하면, '산업 전환'과 '시민 체감' 두 축을 동시에 굴리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국가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과 'AI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광주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자율주행 등 미래 교통 분야 실증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 예산안에 해당 기본구상 용역비 10억원이 반영됐다

◇AI 예산, 전국 분산…효과에 의문 =정부는 2026년 AI 예산을 지역별 특화 분야로 나눠 배치했다.

정부는 피지컬 AI 및 AX 실증 예산을 광주 240억원(에너지·모빌리티AX), 대전 1594억원(버티컬AI 대전환), 경남·전북 각 400억원(경남 AI기반 기계·부품 가공, 전북 AI팩토리 테스트베드), 대구 198억원(로봇·바이오 AX), 부울경 370억원(해양·항만 AX) 등으로 나눴다.

AI 업계에서는 투자를 한 곳에 집중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글로벌 AI 거점인 실리콘밸리나 중국 선전도 스타트업·인재·인프라가 밀집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광주도 2020년부터 AI 집적단지를 조성해 세계적 수준의 GPU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 기업들의 AI 진입장벽을 낮춰 실증 환경까지 마련했다. 그 기반 효과로 광주는 곧바로 대규모 실증 2단계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AI 예산의 광역 분산으로 광주의 AI 집적 전략에 물음표가 붙는다. 여러 곳에 거점이 생기면 중복 투자로 규모 효과가 줄고, 인재도 분산돼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농수축산업 '스마트화' 예산 포함
전남도 미래 100년의 기틀 마련

전남도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40개가 넘는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

역대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데다 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해 재생에너지 수도 조성을 향한 행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49건의 신규 사업 예산(2724억원)이 포함됐다. 이들 신규사업의 총 사업비는 5조 4494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중물 삼아 전남도 미래 100년의 기틀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으로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 사업'(1196억원)과 'K-Grid 인재·창업 밸리'(195억원),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에너지 실증 지원(180억원), 고전력반도체 모듈 실증 인프라 구축(50억원), 해상풍력용 부품(피치·요베어링) 시험센터 구축(20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AI연계 스마트팜 구축(50억원) 등 6개 사업이 포함돼 재생에너지 거점 도시로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남도의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송정에서 목포역을 잇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1632억원)와 익산과 여수를 잇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도 기본 계획수립비 5억원(총사업비 1조 9326억원)이 반영됐다.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 예산 1672억원(총사업비 2조 1520억원)도 포함됐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는 1단계 공사비 전액을 확보했고, 2단계 공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비 80억원이 반영됐다.

중소기업의 이차전지 기술 역량 확보를 위해 이차전지 소재 개발부터 실증까지 지원이 가능한 '미래 이차전지 원료소재 실증 플랫폼 기반 구축'(23억원)과 화순 백신 특구 내에서 암세포의 내성에 대응할 면역치료제 원천기술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차세대 융합 면역치료 원천기술 개발비'(40억원) 등 첨단 R&D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도 대량 확보했다.

농·수·축산업 분야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예산도 포함됐다. 총 사업비 2000억원 규모의 '국가 농산업 AI플랫폼 사업비' 200억원과 '산림버섯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실시설계비 4억원도 확보됐다. 또 농수산 수출 1위 품목인 김의 국제 거래 표준화를 위한 '마른김 거래소 플랫폼 장비 구축비' 4억원도 확보했다.

전남도는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된 고흥~봉래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등 SOC 사업 증액비와 여자만 국가해양정원생태공원 조성 사업,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남센터 유치 사업 등을 위한 정부 예산을 국회 심의 전 지역 정치권과 함께 추가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부처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막바지 기획재정부와 국무총리실 등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면서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최소 3000억원 이상을 더 확보해 내년도 예산 9조 7000억대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원도 가뭄 상황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0일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北 김정은 위원장, 오늘 열차타고 중국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을 위해 내달 1일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향해 출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31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일 특별열차를 타고 평양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는 열차로 20~24시간 정도 걸려 1일에는 출발해야 전승절 행사 전날인 2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김 위원장은 앞서 중국을 4회 방문했는데 2018년 3월 첫 방중 때와 2019년 1월 네 번째 방문길에는 열차로 이동했고, 2018년 5월과 6월 방문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탔다.

이번에 전용기를 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근 몇 년간 '참매 1호'를 사용한 동향이 포착되지 않아 열차 이용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참매 1호'가 노후해 김 위원장이 이용을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도 동선 인근에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의 호텔이 외국인 예약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열차를 이용하리라는 관측을 뒷받침한다.

/연합뉴스

"검찰개혁 합리적으로 논쟁·토론해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 지시…"토론 직접 주재할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검찰개혁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며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회동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